

이재명 정부, ‘대학 통합’ 본격화… ‘서울대 10개’ 구상 시동

미래교육위, 통합 캠퍼스 모델 제안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한국1대·2대’ 명칭 통합 방안 포함
라이즈 개편안 연계운영 방식 반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전반에 걸쳐 대학 통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정책을 준비해온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지역 통합형 캠퍼스’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립대 통합이 오히려 수도권 명문 사립대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고, 대학 서열 해체만으로는 교육 경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지역 통합형 캠퍼스 구축 및 대학 지역 통합형 공동 운영, ‘라이즈 체제’ 개편안 등 대학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제안서를 최근 내놨다.

◆ 지방대 위기, 통합 캠퍼스로 돌파구 모색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유출과 재정난, 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전현직 총장·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육 여건 악화가 겹치며 지역 소멸 위기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 간 통합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COMUE 사례처럼 지역 대학을 공동체로 묶어 공동학위와 자원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은 인접 대학 간 연합 캠퍼스를 구성해 학과를 통합·특성화하고, 공동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점·학위 공동인정을 추진하며, 생활비·주거비 등 실질 지원으로 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경오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중복 투자 방지, 행정 비용 절감 등 재정적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과 질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지방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대학 통합과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 소규모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통합해 역량을 집중하고, 학사·연구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역 통합형 캠퍼스’ 모델

이 핵심 구상이다.

이번 제안서에도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심의 구조조정과 통합을 골자로 구상안이 담겼다. 위원회 임시및사교육 대책본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라며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대학 명칭을 변경해 ‘한국1대’ ‘한국2대’ 등으로 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차별로 1년차 국공립대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년차에는 재원 기반을 마련할 ‘대학네트워크 구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뒤 3년차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 가동, 5년차에는 사립대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통해 고등교육 개편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 국립대 통합론 확산 속 ‘신중론’ 제기

대학 최대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인 ‘라이즈(RISE) 체제’ 개편안에도 이러한 대학 통합 및 연계 운영 모델이 보다 강화, 반영됐다. RISE 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 국가와 지역 간 역할을 분담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가중심대는 기초·보

학분 분야인재를 양성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 구조 개편이 고등교육정책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대학 현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통합 대상, 방식,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논의를 두고 교육계 안팎의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는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지역 국립대 졸업생의 실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국립대 통합은 오히려 수도권 명문 사립대의 위상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대학이 평준화되더라도 사회의 승자독식 구조가 유지되는 한 경쟁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안민석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방현석 중앙대 교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등 6명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고문을 맡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도서관’서 전 국민도 책 빌린다

서울 거주자만 가능했던 대출 서비스
전국민·외국인까지 이용 대상 넓혀
전자책·회원등급 등 일부 차등 적용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그동안 서울 거주자에겐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도서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 도서대출은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에 직장·학교가 있는 시민만 가능했다.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도서관의 특성상 타 지역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지만 ‘서울 지역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서울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1인당 7권까지 도



서울도서관 내부 사진. /뉴시스

서 대출이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대출 가능 권수가 14권으로 늘어난다.

서울 시민과 타 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시는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가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누리면서 서울 외 지역에도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서울 방문 관광객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며 보다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서울도서관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가족 회원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전 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는 서울도서관이 서울 대표 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와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이영범, 세계행정학회 부회장 선출

〈건국대 대외부총장〉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2027년 6월까지 3년 임기

건국대학교는 이영범 대외부총장(사진)이 세계행정학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Administrative Sciences, IIAS)의 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부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3



일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이다.

세계행정학회는 전 세계 정책 분야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과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최대 규모의 비영리 학술기구로, 공공행정 및 정책 관련 지식을 생산하며 행정학 분야

의 다양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소속 부회장들은 각 지역 내에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영범 부총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에는 규제혁신 분야 유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건국대에서는 미래 지식교육원장을 거쳐 현재 대외부총장과 건강고령사회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현진 기자

“챗GPT, 기본부터 실전까지 한번에”

한국미래기술교육원, 2기 교육 진행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내달 4일 여의도FKIT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챗GPT 활용 마스터 : 입문부터 실무까지’ 2기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챗GPT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요약하고, 실무 문서 작성과 이미지 생성, 데

이터 분석 업무의 효율을 높여준다.

강의는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박강민 교수가 맡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 개념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PPT 작성 및 다양한 AI 모델 ▲실무 프롬프트 활용 데이터 분석 ▲멀티모달 생성형 AI 서비스 체험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AI 기반 데이터 시각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웹페이지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인천시, 한미 해조류 탄소흡수 연구 참여

410억 투입해 기술 실용화 추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가공모과제인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흡수 기술의 실용화와 대규모 산업화를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 41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과제로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과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해양 환경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외해 양식 기술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조류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화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해조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 중 하나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블루카본 자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해조류의 탄소흡수 기능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증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해조류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일부로 제도화하고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반 기술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는 외해에서 적합한 해조류 품종을 선별하고 유전체 기반의 디지털 육종기술을 도입해 종자 생산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해상 전처리 장비와 원거리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해조류 양식의 전 과정을 스마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에탄올 등 차세대 바이오소재 개발도 추진된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